

## 교 육

### ≡ 차례 ≡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 □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자유, 평등, 기회의 균등 등 민주사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학업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성공해 기회의 균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지식을 키워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학벌사회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학에 순위를 매겨 한 줄로 세우니 중등 교육이 제

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학벌사회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파생합니다. 해결이 어렵지만 학벌사회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공하면 학벌사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길입니다. 흔히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마해 온 과정을 보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끊임 없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방송대 졸업식에서 2004. 2. 28)

#### □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 동력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에 이르는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습니다.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보육실로 전환하여 학교가 양육과 보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애학생에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 □ 교육제도 점점 더 개혁, 대학도 점차 특성화

교육제도도 점점 더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들도 점차점차 특성화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넣어도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자기들 먹고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일류의 인재가 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부는 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조그만 차이에 급급하지 말고 세계를 크게 내다보고 그렇게 배포 있게 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면 우리 아이들 다 함께 갑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 □ 기회균등 원칙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방향 모색이 필요

전 국민이 완전히 경쟁체제로 가서 전 국민을 서열화하는 교육체제, 경쟁체제로 가보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밤샘 과외를 해서 교육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공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살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뺏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코스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 국민 서열화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만, 이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토론과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에서 2006. 4. 3)

### □ 공부만 잘하는 학생 뽑는 게 반드시 교육적인가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을 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적이 나쁘면 그 이유에 맞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교육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

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우리 교육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키워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겁니다. 통합성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양성도 아직 부족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자유와 창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얼마 전에 OECD 평가기구에서도 한국에 대한 몇 가지를 평가했는데, 일부 신문들은 대체로 한국의 성장력에 관한 평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조언, 이런 것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합 재정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유럽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의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별로 받아쓰질 않았습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큼니다. 너무 일방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들입니다. 강자가 강자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 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이 일방통행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결국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분열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배려가 부족한 사회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배려가 있는 사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의 지성 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 □ 3불 정책 무너뜨려서는 안 돼

3불정책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3불정책 중에서도 대학 본고사정책이 핵심입니다. 고교 등급화는 본고사 제도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핵심은 대학 본고사 제도입니다. 교육의 자유는 가져도 좋지만 왜 선발하는 것까지 꼭 자유를 가져야 합니까?

대개 합리적으로 1% 정도 선발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이를 또 천분의 1로 나눠서 거기서 또 우열을 다 가리게 하자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세가 너무 심해서 정부가 방어해 나가는 것이 벅합니다. 과학기술의 장래를 놓고 3불정책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고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3불정책을 무너뜨리고 본고사 부활시키셔 초·중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퇴보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과학기술정책에 더 많은 관심 가질 것입니다. 경쟁은 부득이하고 긴장은 필요하지만 연구 환경이 불안하지 않게, 말하자면 연구과제 확보위해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 느끼는 환경으로 내몰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 3. 22)

#### □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인성 교육 잘 안 되는 것은…과도한 입시경쟁 탓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교육이 잘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열린교육이라고 명명해 초·중등 교과과정을 바꾸어 왔습니다. 부단히 선생님들과 갈등도 일으켰고, 선생님 안에서도

하자는 분과 귀찮아하는 분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열린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초·중등학교까지는 다양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잘 안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입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오면 입시에 걸리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입시 학원처럼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교과와 대학입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때부터 입시를 획일적인 전형방법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전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2002년 교과과정 개편도 그 점에서 진보해 왔고, 2008년 개편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 □ 3불 정책 더 이상 흔들지 말고 뽑기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 해야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 배우는 학생들 해 드릴까요? 본고사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하는 나라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여러분이 한국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도 하시고, 제가 틀렸다면 수용하겠습니다.

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중심 업무보고(과학기술부)에서 2007. 3. 22)

#### □ 하향평준화 주장은 사실 왜곡, 중등학생 학력수준 세계 5위권

지금 제도가 학습능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중등학생들 학력 평가는 OECD 국가들 중 제일 나쁜 과목이 세계 4-5위입니다. OECD에서 하는 학력평가 대상은 저 시골에 있는 학생까지를 다 함께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지, 서울의 우수한 학생 일부만 뽑아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평균 5위 안에 들어 있고,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해도 10위권 아래로는 어떤 과목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중등 교육은 그만큼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차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가까우니까요.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도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꺼내 들곤 합니다. 한국에 하향평준화된 교육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 후에 상향평준화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다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배려 정도 등이 다 포함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좀더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고교 등급제 되면 고교입시 부활, 초·중등학생까지 입시공부 해야

말하자면 본고사라는 자체가 시험 선수만 다 뽑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니 내신평가를 학력 중심으로만 하려 하고 게다가 고교 등급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또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고교교육은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고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획일화된 학교를 다시 일률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등급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제는 결국 학력 중심의, 시험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시험에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인성 교육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등급이 생기면 부득이 입시를 부활시켜 줘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입시공부 해야지요. 그러면 중학교가 입시공부를 하면 거기 또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류 중학교가 생기지요. 그러면 1등급 중학교, 2등급 중학교, 3등급 중학교.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공부를 해야 하는 연쇄적인 교육의 망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3불 정책 외에는 다 자율

첫번째가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금지하는 것이죠. 두번째로 학생을 평가하는 데 그 학생의 출신 학교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여 입학제라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돈 주고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어서 아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본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기여 입학제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자유이고 세 가지만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누군가가 3불정책하다 보니 그렇게 불리게 되었나 봅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대학이 자율성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이 세 가지 빼고는 다 자율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율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정부 비판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교육하든 마음대로 합니다. 대학교 연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학 자율이 왜 필요합니까? 대학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는 종교를 이유로 자유로운 학문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육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연구도 못하게 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 교육의 자율이 나온 것이지요. 대학교 자율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대학교가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등록금도 자율이고 입시도 자율이다, 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교수 사회에서 서로 경쟁도 평가도 안 받는 것을 자율로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율이라는 것을 무한정 그렇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유 위해 공교육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도 모두 자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면 좌측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면 우측통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율 시민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다 질서 유지와 그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율을 너무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 창의성과 효율이 무너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과일 깎아 가지고 아이들 방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몰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공공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 □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서 이뤄지는 것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장은 공교육입니다. 사교육은 강좌이지 교육으로서 는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한 교육은 공교육의 장에 서 이뤄지는 것이지 사교육의 장에서는 이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의 해답은 공교육을 되살려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 방향으 로 나가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공교육의 강화와 교사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복지의 수 준과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 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교육 재정을 늘 리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의 다른 예산을 옮겨서라도 쓰 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줄일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돈 내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국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이기 때 문입니다. 같이 해서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마지막까지 공교육 살리는 일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 □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가정의 만남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 관리와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

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방과후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방과후학교도 이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빈곤아동과 청소년 대책은 사랑과 윤리공동체이자 가장 기본적인 교육단위인 가정에 대한 대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4. 7. 1)

#### □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방과후학교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펴기 어렵습니다. 2004년만 해도 사교육비가 약 8조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대학입시에 집중해 놓고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돼 갈 것입니다. 대학교육이 특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입시 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있고, 정부도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2006년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방과후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

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 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 갑시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교육장과 열린 대화에서 2006. 5. 4)

#### □ ‘우리들의 자식’들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가야

누구라도 내 자식 일류 대학교 보내고 싶고, 대학은 대학대로 좋은 아이들 뽑아서 일류로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돕고 의지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끝내 힘 있고 잘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 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낙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다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고 함께 구상하고 손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입시 환경 바꾸고 공교육 환경 바꿔줘야

두 가지입니다. 입시 환경을 바꿔 줘야 하고 공교육 환경을 바꿔 줘야 되는 것이지요. 학교 안에서 다 공급되면 학원에 가라고 해도 누가 가겠습니까? 좋은 시설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보호해 준다면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입시제도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만들어

줘야 공교육을 열심히 받지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학원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학원을 부도덕하다거나 악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교육 바깥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분명히 남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교육의 기회균등의 문제까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 □ 공공의 재산 많은 나라가 선진국, 가장 중요한 공공재는 교육

공공의 재산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 사회의 부를 전부 개인이 집안의 금고 안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 사회는 부자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선진국은 안 됩니다. 개인의 집 담장 바깥에 있는 재산의 총량을 합하면 선진국의 순서대로 더 많은 것이죠. 공공의 재산이 더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교육입니다.

저도 교육을 위해서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칩니다. 참여정부는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서 말도 한번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 전후를 오고갑니다. 조세 투명성이 높아져서 세금 착실히 걷어 놓으니 그걸 가지고 참여정부 세금 많이 걷었다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받침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 보자고 교육부총리한테 소리 드렸는데 교육부총리도 보니까 사정이 뻘하지 않습니까. 방침을 안 만들어 오고 말았습니다. 만들어 오셔도 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육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각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만 져 주면 그 사회를 그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보고회에서 2007. 10. 12)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도 교육입니다. 세계일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통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왜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나 이거죠.

(지역아동센터 방문 및 정책간담회에서 2007. 10. 12)

## □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부처 공무원들과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무원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인력과 예산, 설비를 모두 갖추고 출발하면 좋겠으나 시범사업과 검증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기에 일선 선생님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 검증되면 점차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성과는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하는가,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할 테니, 선생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여정부는 아이들의 배우는 교육환경,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치는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초청 오찬에서 2007. 5. 15)

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정책 내놔도 정권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가 국회 교육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정책이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교육개혁안에 기초해서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 가지고 문민정부가 마련해 놨던 기초를 뒤집어 엮은 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방향에 있어

서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기면 조금씩 바꾸고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엽의 문제이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근간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

##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 □ 대학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제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장기제에 맡기고, 반드시 국가가 재정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조정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 경쟁력 강화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하고 필요하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학에 우수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대학이 빠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려야 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학부에 의대, 법대, 경영대 등이 있는 구조가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분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2005. 3. 25)

## □ 뽑기 경쟁이 아닌 가르치기 경쟁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이 9등급입니다. 네 가지 영역 중 모두 1등급 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5%입니다. 천분의 1.5입니다. 만분의 15입니다. 만 명 중에 15명이면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 기록이 보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저는 뭐 십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 만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잘 가르치기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봐서도 입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은 아닙니다.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뽑기 위한 자율이 아니라 맘껏 연구하고 실력을 키워 내는 자율을 찾아야 합니다.

(EBS 특강에서 2007. 4. 8)

## □ 지도적 역할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 버려야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려는 어떤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규제를 받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를 불쑥불쑥 내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의 버릇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결코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대학이 공무원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을 강조하시는데 대학자율 존중해 드려야지요. 아무도 대학자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학의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서 자율의 권리를 함께 공유해야지 어느 집단만 자유를 누리고 어느 집단의 자유를 위해서 나머지 집단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을 때는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하는 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대학의 자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총장과의 토론회에서 2007. 6. 26)